

## 행정소송법

41.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?

- ① 취소소송 -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- ② 무효등확인소송 -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- ③ 당사자소송 - 법률에 정한 자
- ④ 기관소송 - 법률에 정한 자
-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-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
42.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
-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
-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
-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
- 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

43.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.
-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,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,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44.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적극적 형성소송
- 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
- ③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
- ④ 민중소송
- ⑤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

45.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     ② 원고적격 인정 여부      ③ 재량남용 여부
- ④ 대상적격 인정 여부      ⑤ 소의 이익 유무

46.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소송
- ㄴ. 「국민투표법」상 국민투표무효소송
- ㄷ. 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소송
- ㄹ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
- ㅁ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

- ① ㄹ, ㅁ      ② ㄱ, ㄴ, ㄷ      ③ ㄷ, ㄹ, ㅁ
- ④ ㄱ, ㄴ, ㄷ, ㄹ      ⑤ ㄱ, ㄴ, ㄷ, ㄹ, ㅁ

47.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
- ② 건축신고 반려행위
- ③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
- ④ 검사가 제기한 공소
- ⑤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

48.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.
- ②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.
- ④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.
- 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.

49.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상상 별점의 배점
-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
-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
- 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
- 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

50.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과세처분
- ㄴ. 개발부담금부과처분
- ㄷ.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
- ㄹ.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

- ①  $\neg, \bot$       ②  $\neg, \exists$       ③  $\bot, \sqsubset$       ④  $\bot, \exists$       ⑤  $\sqsubset, \exists$

51.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.
-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.
-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.
- 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.
-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.

52.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집행금지결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 
③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 
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

53.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.
-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
-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.
-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54.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.
- ②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.
-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.
-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.

55. < 보 기 >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2px 10px;">&lt; 보 기 &gt;</div>                 |
| <p>주 문</p> 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 <p>2. 다만, 피고가 2017. 2. 1. 원고에 대하여 한 OO처분은 위법하다.</p> <p>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</p> |

- 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② 법원은 <보기>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.
- ③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<보기>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<보기>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.
-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,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56.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.
- ②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④ 행정청은 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「행정소송법」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.
- 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「행정소송법」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.

57.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.
- ②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.
- 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,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.
- 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,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.

58.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·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.
-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-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,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.

59.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세무조사결정
- ㄴ.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
- ㄷ.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
- ㄹ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·고시

- ① ㄱ, ㄴ 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 ③ ㄷ, ㄹ      ④ ㄱ, ㄴ, ㄹ      ⑤ ㄴ, ㄷ, ㄹ

60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.
-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.
-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.
-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- 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61.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개별공시지가결정
-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‘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’
- ③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
- 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,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
- 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, 증액경정처분

62.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
- ㄴ.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
- ㄷ.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
- ㄹ.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·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

- ①  $\neg, \perp, \sqsubset$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 $\neg, \perp, \sqsubset$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 $\neg, \sqsubset, \sqsubset$   
④  $\perp, \sqsubset, \sqsubset$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 $\neg, \perp, \sqsubset, \sqsubset$

63.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- ②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-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,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- ④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-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64.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.
- 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④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.

65.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.
- 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66.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.
-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.
- 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.
- ④ ‘처분등’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.
- 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67.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- 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.
-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.
-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.
-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**68.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?**

- ① 「건축법」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-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
- 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
- ④ 감봉처분이 있는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
- 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

**69.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「행정소송법」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.
-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.
- 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70.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.
- ② 확정판결은 자박력, 확정력, 기속력을 가진다.
-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④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.
- 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,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.

**71.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.
- 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.
- 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72.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,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.
-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,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,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,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73.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추가·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.
- ②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과 구별된다.
-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점을 취하는 경우,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·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.
- 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,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74.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,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.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.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,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각하판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취소판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일부취소판결
-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의무이행판결

75.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6조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.
- ③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.
- ④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.
-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.

76.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.
-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.
-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.
- ④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·입증할 수 있다.

77. 항고소송에서 주장·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.
- 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·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.
-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.
-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·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.
-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·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**78.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.
-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, 간접강제가 허용된다.
-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, 간접강제가 허용된다.
-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.
-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.

**79.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,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.
-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.
-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,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.
-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**80.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.
-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.
-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.